

##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대법 “해임은 정당” 2심 파기

이  
슈  
판  
결

### 대법 “피해자 나이 내세워 비위 가볍다 단정 안돼”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을 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황소심 재판부가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으로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 해임은 과도하다고 해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이 인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마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짓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스로 교원 신뢰를 실추시킨 김씨가 교단에 복귀해 종전과 달리 학생을 지도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헌법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 를 누리는데 아무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가”라며 “이를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해보면, 김씨가 해임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달성되

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9일 0시15분께 광주 서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A씨 가슴을 추행해, 경찰 조사 뒤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같은해 12월 그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교사에겐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씨의 추행은 ‘고의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피면에 처하도록 규정해 해임처분은 이보다 가볍다”고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는 즉시 차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경위에 비춰보면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황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판결하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사회경험 없는 순진한 20대 여성 만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통념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광주여성민우회)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2심 대신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격담합 ‘처벌’

광주시, 계약해제 등 신고 의무화·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 신설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위는 엄중 조치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

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리를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기 위해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포함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법, 중개업자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가격왜곡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범제화 등이다.

신봉우 기자

28년간 한결같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2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시작한 지 정확히 28년이 되는 날이다.

##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민족이 있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청년,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족군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 |